

2013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방향

환경부에서는 최근들어 환경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 기술에 기반한 통합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부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김 승 희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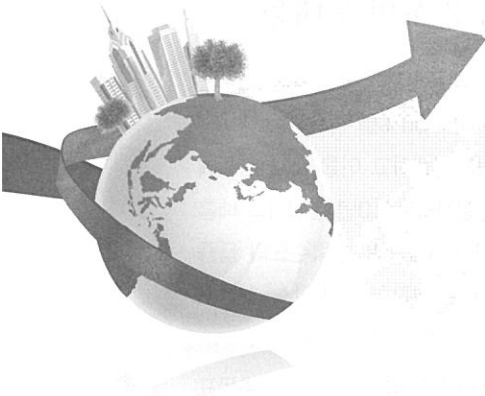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자연자원과장 등 역임
tel. 044-201-6640

지난 5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목표로 삼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에 따른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다. 이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대규모 토목사업 등 Top-down 방식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통한 창조경제의 달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실현을 향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특히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과제별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국가재난연감에 따르면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환경오염사고는 '04년 45건에서 '10년 10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 구미시 소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총 554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되었다. 본래는 사고를 유발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면서 피해자인 국민의 돈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오염사고는 점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실효적 규제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피해의 특성상 피해자인 국민들은 장기간 법률 쟁송에 매달려야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범위의 보상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기업 또한 막대한 피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불의의 사고 한 번으로 기업의 이미지 추락 뿐 아니라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는 등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규제제도의 도입은 국민, 기업, 국가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대상 시설을 한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원활히 하여 환경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히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 등 재무적 담보 가입을 의무화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거대한 피해 비용에 대한 위험 분산을 위해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 재보험 및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환경 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보험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5년 시행을 목표로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고 환경오염 피해보험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54.6%에서 허가 받지 않은 특정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 수질 뿐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총 30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60%에 해당하는 18개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었다. 이처럼 환경 관리의 핵심이자 기본인 환경오염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시 되고 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1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9개 법령에 따라 최대 10개의 인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환경오염과 직접 연관이 적은 단순한 절차 미이행과 같은 무분별한 위반행위를 양산하는 등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한 번 허가를 받고 나면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영구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기술 개발 촉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정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변화되는 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선진화하여 최신기술에 기반한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최적가용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9개 법령, 11개 인허가 사항을 통합하여 사업장 별로 1개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주요 업종에 대한 시범사업과 전문가 포럼을 확대 운영을 통해 통합 법령(안)을 확정하는 한편, 최적가용기술 선정기준·절차 등을 포함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09년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09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화력 발전소 신설이 포함되는 등 정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약속된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당초 설정한 배출전망치와 업종별 감축잠재량을 면밀히 재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부문별 감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계·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이 담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말까지 수립할 것이다.

맺음말

올 해는 정부 출범 첫 해로서, 여러 국정과제들의 로드맵과 기본 방향 등이 확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환경부는 국민행복과 환경복지의 달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 내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3.0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